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고추전용 복합비료 '슈퍼고추' 인기
 - 남해화학(주)의 고추전용 복합비료인 '슈퍼고추'가 고추농가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 지난해부터 인기몰이에 나서 경북과 전북 등 고추 주산지를 대상으로 3279톤이 판매
 - '슈퍼고추'는 질소, 인산, 유허 등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유허 성분이 풍부해 고추의 과육을 두껍게 하고 착색 및 향을 증대시킴
 - 사용시기는 밀거름으로 정식 1~2주일 전에 시비하면 되고, 시비량은 노지재배 시 10a당 86kg(4.3포), 시설재배 시 100kg(5포), 밀식재배 시 89kg(4.3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

※ 2018.1.5. 영농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2018년 시무식 열고 새해 힘찬 도약 다짐
 - 1월 2일 팜한농은 '2018년 시무식'을 열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함
 - 김용환 대표는 신년사에서 '혁신으로 지속



적인 이익성장을 실현하는 2018년', 'Innovation Leader로 발돋움하는 2018년'을 만들기 위해 사업별 핵심전략 실행에 집중할 것과 경영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것을 강조

- 이와 함께 정도경영과 컴플라이언스를 체화하며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팜한농을 만들자고 당부

※ 2018.1.2. 팜한농 자료 인용

□ (주)풍농



- '18년 주력비종 '명품유비롱' 인기몰이
 - (주)풍농이 새해 주력비종으로 선보인 '명품유비롱'이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음
 -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 개발한 고성성비료인 '명품유비롱'은 속효성·지효성·완효성 양분을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사용량 및 시비노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비료임
 - 특히 균일하고 단단한 입자로 측조시비와 기계살

포 효과가 우수하며, 기능성 요소분해억제제 (NBPT) 함유로 시비기준량의 10~20% 절감 사용 및 가지거름 생략이 가능함

- 또한 파종 및 정식 전 토양혼화 처리해 사용하면 양분흡수 이용률 개선 및 수도 등 작물 생육향상, 수량증대효과 등이 탁월함

※ 2018.1.5. 영농자재신문 자료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2018년 농업기술실용화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8. 1. 8(월)
- 장 소 : The-K호텔 금강홀(양재동)
- 참석자 : 협회 이사
- 주요내용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 설명 등

□ 「협회 창립 제43주년 기념 행사」

- 일 시 : 2018. 1. 10(수)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자체행사 진행
- 무기질비료 산업 공로자 2명 선정, 정기총회 시 수상

□ 「2018년도 비료포장재 분담금 비용산정 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8. 1. 17(수)
- 장 소 : 교육시설공제회관 9층 중회의실
- 참석자 : 협회 전무 등 비용산정위원 등 10여명
- 주요내용
 - '18년도 비료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단가 확정 등

□ 「2018년 1차 원료구입자금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1. 22(월)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농식품부, 농협은행, 농촌경제연구원,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 등 15여명
- 주요내용
 - 원료구입자금 신청 및 배정 심사
 - 원료구입자금 애로사항 청취 및 토론 등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2018 비료산업 전망

- 계통구매가격 인하, 만성적자
 - 무기질비료 시장은 기회적 요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암울한 분위기임
 - 농경지면적 축소에 따른 사용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요소 수입가격은 지난해 대비 원달러 환율의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게 오를 전망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FAX : 02-552-2814



식량과 비료 -2018년 1월호-

- 또한 환경관련 규제 강화와 친환경 육성 지원 정책 등과 맞물려 무기질비료 업계의 어려움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계통구매가격의 지속적인 인하로 업계의 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18년 계통구매가격도 인하되어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전망

※ 2018.1.8.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 인용

□ 재활용률 높은 비료포장재 'EPR' 적용 제외를

- 한국비료협회와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2018년 비료업계 최대 화두를 EPR(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꼽음
- EPR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03년 1월부터 시행중이며, 제품 생산자들이 재활용 일련의 전 과정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가 EPR 적용대상이어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비료업체들은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있음
- 비료협회와 유기질비료조합은 비료포장재의 재활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비료포장재를 EPR 적용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함
- '15년 농경연이 실시한 '농가 호당 폐영농플라스틱 발생량과 미수거량' 농민조사결과 조사농가 호당 연간 폐영농플라스틱 발생량 920kg 중 1.2kg을 제외한 전량이 발생 단계에서 수거된 것을 나타남
- 비료협회 조규용 이사는 "한국농수산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비료·사료 분담금 단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내용에서도 비료·사료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실적이 94.5%로 높았다"며 "금전상 가치가 높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은 EPR 대상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함

※ 2018.1.9. 한국농어민신문 보도자료 인용

□ 농협, 주요 영농자재 가격 인하

○ 비료 2.1%, 농기계 6.1% 등 인하

- 농협이 올해도 주요 영농자재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함
- 농협중앙회는 18일 올해 주요 영농자재 공급계약 체결결과를 내놓고, 올 한해 자재 가격 인하로 367억원의 영농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농협 관계자는 "최근 농약과 비료 등에 쓰이는 국제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생산원가 상승,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영농자재 가격 인상이 크게 우려됐다"면서
- "이에 농협은 1131개 농·축협의 공동구매 참여로 물량을 결집하고,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메리트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인하했으며, 농기계의 경우 연간 수요물량의 60%를 사전에 비축해 선제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 농협 회장은 "농산물 제값 받기, 영농자재 가격 인하 등 우리 농업인이 소득증대 효과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올 한해 사업추진에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며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만들기에 매진해,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FAX : 02-552-2814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2018.1.19.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자재값 인하 만으로는 한계

농협이 올해도 주요 영농자재가격을 끌어내리면서 3년 연속 인하하는데 성공했다. 자재별 인하율을 살펴보면 비료 2.1%, 농기계 6.1%, 농약 1.2%, 종자 4.4%, 사료 2.2% 등이다. 농협은 영농에 가장 밀접한 5대 자재가격을 인하함으로써 2016년 1500억원, 2017년 692억원이, 올해 367억원 등 총 26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 평균 물가상승률이 1% 이상이었던 점과 가격인하에 따른 농자재 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점을 감안해볼 때 각고의 노력이 뒤따랐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농자재 업계는 원자재값 인상, 자재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자재값이 인상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일부 업체는 농협과의 거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할 정도여서 난항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권익보호와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영농자재 가격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농업소득은 1007만원으로 2003년 1057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산농산물의 경쟁력하락에도 원인이 있으나 농업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자재값의 비율이

30~40%에 달하는 탓도 있다. 농업총소득은 줄어드는데 반해 영농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농가소득 향상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영농자재값을 인하한 것은 경영비 부담을 절감, 농업소득을 끌어올리는 반사이익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농업인들을 위한 농협의 과감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3년 연속 농자재값 인하가 자칫 농자재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농자재값 인하가 거품이 빠지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경영비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농자재의 품질저하나 재투자 여력이 부족해 농자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경우가 역시 농업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이다.

또 하나는 농업소득을 영농자재비 인하로 메우려 해서는 안되고, 메울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협이 영농자재값 인하로 절감한 농가경영비는 지난 3년간 2600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지만 이를 농가별로 환산하면 10만 400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소득은 엄연히 영농활동 즉,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제값을 받는 것으로 평가돼야지, 경영비 절감이 주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농협이 주창하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역시 핵심은 농자재값 인하가 아닌 농산물 제값받기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2018.1.23. 농수축산신문 사설내용 인용

□ 농자재 가격 낮추기 보다는 농가 조직화·규모화가 중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 농기자재신문 신년사 통해 농가 조직화·규모화 강조

- 아래는 농기자재신문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농기자재신문 가족, 독자 여러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설훈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만물이 얼어붙은 추위가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1월은 여전히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무술년 새해에 농기자재신문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촛불시민이 이루어낸 새 정부가 출범하고 맞는 뜻 깊은 첫 해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겪었던 시련과 불확실성이 올해에는 말끔히 해소되고, 농기자재 산업에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업계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AI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방역 시스템 도입을 위해 농업 관계자 여러분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자재 가격을 보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료 값을 비롯해 농자재 가격을 낮추는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농가를 조직화·규모화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농업 현실에서 농지는 생산수단이 기보다 농가의 자산이라는 현실 때문에 당장 농지 규모화 성공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기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정보 요구와 수요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신 농기계 및 농기자재를 전시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농기자재 업계와 농업인 간 정보교류를 통해 농기자재 산업과 농업생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새해에도 정론직필의 자세로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기자재 대변지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해에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농기자재신문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8.1.3.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농기자재 산업정책 주도할 단제창 협의체 활성화하자

무술년(戊戌年) 새해. 세시(歲時)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세모(歲暮)에 가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토종 농기자재산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회한이 작지 않다. 농기자재산업과 해당기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속내를 잘 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여기면

서도 아쉬움은 늘 있기 마련이다.

누가 뭐라 해도 미래 농업의 지향 방향은 ‘스마트 농업’이다. 우리 농업이 스마트 농업이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에 이론이 없다. 가능하게 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현실적인 애로임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의 큰 방향은 스마트농업이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미 스마트 농업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다만 관련된 다양한 지원요소들이 바라는 대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농업 전반에 걸쳐 작용하게 되는 기술과 관련 농업용 기자재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지원요소는 농업 내부적인 변화와 혁신보다는 치밀하고 효율적이면서 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탁월한 외부적인 스마트 요소이다. 농기자재 기업들에 의해 개발, 공급되는 기자재는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난방기, 환경조절기 등 매우 많다. 이러한 기자재가 우리 농업을 스마트하게 이끌어가는 요소이며 이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제공하는 농업기자재 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 농업이 진전되기 때문이다.

장차 스마트 농업에서 기술적, 물적 토대를 제공할 농업지원 산업, 즉 농기자재산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토종 농기자재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이 어렵다. 이들의 경영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들이 생산하는 각종 기자재들의 수요가 늘어가고, 해당기업들은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국내수요든 해외수요든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적어도

축소는 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이다. 1990년대 호황기 이후, 2000년대 들어 일시적인 수출확대가 국내 시장의 축소 내지는 분할을 보완했지만 지금은 어렵다.

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농기자재산업에 대한 시각변화를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은 지금의 문제를 가져왔고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의 토종 농기자재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스마트 농기자재와 생산, 정책을 걱정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관련 농기자재산업정책이 없다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곤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농기자재산업정책의 빈곤을 타개해 나가야할 주도적인 추동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농업정책 내에 농기자재산업정책이 들어갈 여지는 좁다. 따라서 농업과 농기자재산업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별도의 농기자재산업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이때 중심적 세력인 협의체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작금의 중대한 문제이다.

이제라도 토종 농기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심세력의 구성에 농기자재산업계가 나서야 한다.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나서기도 어렵고 산업과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기술과 지도업무가 중심인 농촌진흥청이 홀로 나서서 농기자재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슈제공, 나아가 협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협치를 지향하면서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과 산업계가 모두 나서야 하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화가 필요하다.

수년전 우리는 농기자재 관련 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다. 많은 관련단체장들이 합의했었고 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실체가 온데간데없다. 당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 운영이 미미하여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것이 맞다. 배고프다고 소리만 지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 당장 농기자재 관련 단체장 협의회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이다.

거버넌스를 통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토종 농기자재산업의 전체적인 상황점검과 수출을 위한 전략 마련이다. 국내 토종 농기자재산업이 당면한 시장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농기자재시장 방어와 함께 수출을 위한 전략을 꾸려야 한다. 우리가 선택하게 될 농기자재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선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농기자재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해당되는 모든 농기자재기업을 육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술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엄혹한 환경은 여전하다. 많은 석학들은 우리경제상황을 온수주청와(溫水煮靑蛙)로 표현하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더 강화되는 무한경쟁의 살벌함은 그 도를 더할 것이다.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에 대한 압박을 보라. 중국과 일본의 행태를 보라. 거기에 인정이 들어갈 틈이 있던가. 강대국들은 자기의 논리만을 우격다짐하는 시대이다. 전쟁이라는 위험도 배제되지 못한다. 백척간두의 시대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그들의 이익과 합치되지 않

는 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농업과 농민, 이들을 지원하는 토종 농기자재산업과 기업들의 앞날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관계자는 없다. 특히 나라를 걱정하는 정부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들의 걱정만으로 토종 농기자재 산업이 이 질곡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다부지게 대들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심해야 한다. 특히 작은 덩치와 낮은 기술적 조건의 토종 농기자재기업들은 더욱 그러하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된 산·학·관·연이 협심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이제라도 농기자재 관련 단체장들의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이 하늘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 토종 농기자재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길 무술년 원일(元日)에 바란다.

※ 2018.1.4. 영농자재신문 심층기획 기사내용 인용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 행정예고

- 농촌진흥청은 1월 3일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공고함
-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및 원료규정 개정
 - 규산질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용광로) 광재(슬래그)로 하고



식량과 비료 -2018년 1월호-

-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니켈 100 mg/kg, 크롬 800 mg/kg, 티탄 6,000 mg/kg으로 개정

○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 보완·개선

- 비료의 명칭 추가를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함량을 다르게 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명확화
- 환경부고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폐목재류의 세부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목재 규정 변경
- 가축분뇨발효액의 살포기준 규정 변경
- 상토의 비료생산업 등록 시 재배시험성적서 제출 규정 명확화
- 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토에 톱밥,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가축의 알 또는 그 껍질, 혼합유기질에 어분 추가
- 퇴비 등의 원료로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려는 지정 신청자의 기준 명확화

※ 2018.1.3. 농촌진흥청 공고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농림축산식품부, '18년도 정부업무보고

-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주제로 업무보고 진행
 - 농식품부는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 임
- 농식품 부분에서 총 3.3만개 일자리 창출 목

표, 재정지원 등 정책수단 총 동원

-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농지·교육 등을 종합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
- 또한 창업보육, 맞춤형 기술개발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
- 아울러 반려동물·말산업 관련 자격증 신설과 연계산업 육성으로 3만불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

-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농업인안전 보험료 인하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 또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 영농도우미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할 계획을 밝힘

※ 2018.1.18.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년 10대 농정이슈 선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을 고려하여 2018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함
 - 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다기능 농업의 실현을 위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시와 공익 목적 직불제 확충
 - 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체계적 구축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FAX : 02-552-2814

- ③ 정부 주요 국정 방향 중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이를 위한 농정 거버넌스 개편
- ④ 농촌다움의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재생
- ⑤ 사람 중심 농정의 주요 정책인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확산으로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농촌 공동체 복원
- ⑥ 농가 고령화와 혁신역량 정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창농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 선도
- ⑦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부문 적용 확대를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 ⑧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목표가격 재설정
- ⑨ 농업 생산환경 개선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축사육환경 및 방역체계의 획기적 진화
- ⑩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통상 이슈 대응 강화

※ 2018.1.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160호 인용

□ 환경부,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

- ‘국민건강 확보’ 주제로 핵심정책 보고
 -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임
 -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하여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함
 -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할 예정
 -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공장 입지단

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

- 또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임

※ 2018.1.23. 환경부 보도자료 인용

□ ‘18년 농협 업무보고, 농축산물 제값 받고 부가가치 높인데 총력

- ‘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
 - 농협은 18일 대전 ICC호텔에서 개최한 충청권 ‘2018 농업인 행복농담’ 행사에서 농축산물 제값 받고 팔아주기, 식품가공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밝힘
 - 우선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맞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사업을 강화하고 법률자문 확대 등 농촌복지 증진과 농민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획
 - 경제지주는 로컬푸드직매장을 국민 먹거리 장터로 만들기 위해 1농협·1로컬푸드직매장을 추진하고 벼 수확기에 농가에서 원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해 쌀값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힘쓸 계획임
 - 금융지주는 비효율적인 경영요소를 개선하고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힘쓸 계획임

※ 2018.1.19.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개정 김영란법 시행

-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FAX : 02-552-2814

○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10만원까지

- 김영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함
-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이상 포함한 제품만 해당
-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도를 낮췄으나 현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할 경우 합쳐서 10만원까지 가능함
-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함
-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청렴사회로 가려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며, “선물은 1년에 두 번 명절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이라고 말함

※ 2018.1.17. 국민일보 기사내용 인용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 농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함

-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하며 '17년 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
- 지원단가는 평균 340만원/ha로 조사료, 두류 등 품목군별 차등화 지원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
 - * 조사료(400만원/ha), 일반·풋거름작물(340만원/ha), 두류(280만원/ha)
- 대상품목은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산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임
-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해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18년 11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 각 도·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하여 작부체계 교육·홍보, 종자 확보 등 현장기술 지원을 통한 원활한 타작물 전환 지원 예정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2018.1.5.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

□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밭농업소득 증진

- 농식품부는 '18년도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5만원 인상하여, 농업진흥지역은 ha당 637,844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478,383원으로 고시함
- 이번 밭 고정직불금 인상은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가

소득안정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 확정함

- 앞으로 '20년까지 밭농업직불금 단가를 현재 50만원(ha당)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밭작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을 밝힘

※ 2018.1.23.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

□ 농업생산액 48조9680억원 전망

- '18년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48조9680억원이라는 전망치 제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전망 2018'대회를 개최하고 농정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짐
- 농업전망 2018에 따르면 농업생산액 예정치 중 재배업 생산액은 4.0% 증가한 29조4560억원으로 채소류와 과실류, 특용·약용작물이 각각 10.4%, 5.6%,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3969만원 내외로 전망되었지만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8.7% 감소한 1014만원으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은 하락세를 지속해 25.5%에 머물 것으로 나타남
-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가축질병 외에도 새로운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농업 여건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공익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2018.1.24.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 인용

□ 농촌인구 감소시키는 농업정책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기사가 방송과 신문의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저출산이 당초의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어서 매년 2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나던 인구가 2017년에는 8만 명 남짓에 그쳤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도 '이상 급감'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빨라지는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는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인데, 특히 이것이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인구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다.

우리나라의 농업인력 및 농촌인구의 감소추세가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래전부터 농업인력 및 농촌인구의 감소, 그리고 고령화 추세의 심각성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거꾸로 농업인력과 농촌인구를 동시에 감소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고, 지금까지 이러한 기조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즉, 농촌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귀농·귀촌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전체적인 농정기조는 여전히 농업과 농촌인구의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업농' 위주 농업구조 개선정책

농업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농업구조개선 정책이다. 소위 전업농 육성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 정책은 농가당 경작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농의 기계화를 추구하고 투입 노동력의 절약을 수반하는 것이다.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추구했던 정책이지만, 농업

생산기술이 발달한 198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폐기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식량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동시에 농산물의 공급과잉뿐만 아니라 농업인력과 농촌인구의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 농가인구가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효율적인 농업생산을 위해서 2~3% 수준으로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까지 학계에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중요한 주장으로 제기되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감소 현상은 자연적인 감소라기보다는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시행중인 다양한 영농 기계화 지원 사업, 농지 규모화 사업, 각종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이 농촌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실로 농업인력 감소가 염려된다면 이들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기업체’ 성장 위주 농촌개발사업

한편, 지난 정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시행된 6차 산업화 정책을 포함한 각종 농촌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촌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업지원 대상의 선정이나 평가를 할 경우, 주로 성장가능성, 매출액, 일자리 등의 지표가 적용되는 것이다. 사업체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거나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대적인 시설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서는 첨단 설비를 다루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단순 작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이나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순 작업 일을 줄이게 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총량적으로 해당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개별 농가의 소득증대나 일자리 증대를 유도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가능성이나 매출액 증대를 사업성과 지표로 적용하게 되면, 농촌일자리 감소와 인구 감소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중소(또는 영세)규모로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체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즉, 농촌지역의 산업화를 도시의 산업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농촌인구의 감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 아닌 ‘지속가능성’ 초점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규모 확대를 지향하는 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실제 농업생산, 유통, 가공, 판매의 각 단계에서 효율성과 산업화를 추구하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고용 노동력의 감소를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책 담당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ICT 융복합, 첨단농업, 스마트 팜, 유통의 효율화 및 규모화, 대량 판매처의 확보 등의 개념이 농촌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지향들은 소수의 재벌기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안기고 빈부의 격차와 주민의 소외를 유발하게 된다. 농업의 산업화를 먼저 추구했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핵심 농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농촌의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고, 복합영

농을 통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지역적인 식품공급체계를 형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에 따른 새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농정의 담당자들이 ‘농업의 산업화’라는 낡은 가치에서 벗어나야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인력이 유입될 수 있고, 새로운 발전 동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길 기대한다.

※ 2018.1.12. 한국농어민신문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내용 인용

□ 식량자급률 향상에 적극 나서라

국민의 생존과 기본권을 위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2015년 50.2%로 목표치인 57%에 미달한 데 이어 2016년에도 50.9%에 그쳤다. 2017년 목표치 57% 달성은 요원해지고 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탓이 크다. 정부가 밀·조사료·녹비작물 등의 재배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면적은 목표치에 크게 못미쳤다. 자급률 제고의 기반인 농지 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따라 진흥지역마저 잇따라 해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법제화돼 있지 않다 보니 강제성이 없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부진의 이유다.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자급률과 소비가 엇갈리는 품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려는 구상까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지감소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기존보다 낮춰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뜩이나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식량자급률 목표치인데 이마저도 낮춘다면 식량자급률 제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방안과 재정 지원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정부 지원을 명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목표치 설정에 정책실명제를 도입, 정책담당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생산 측면에서는 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소비 측면에서는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기후변화, 국제 곡물가격 변동 등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018.1.26. 농민신문 사설내용 인용

5 무기질비료 및 식량 통계

□ 비료 원자재 수입가격

(단위: \$/톤)



식량과 비료 -2018년 1월호-

구분	2017년 평균	2017년	
		11월	12월
암모니아	303	307	350
요소	268	339	309
DAP	355	380	411
염화칼륨	300	315	304
환율 (매매기준율)	1,130.96	1,103.02	1,085.59

※ 관세청 무역통계, KEB하나은행 인용

□ 세계곡물 수급 상황

(단위 : 백만톤)

구분	'16/'17 (추정)	'17/'18(전망)	
		12월	1월
생산량	2604	2563	2566
총공급량	3230	3218	3219
교역량	431	416	416
총소비량	2578	2577	2576
기말재고량	653	641	643

※ WASDE, 2018.1.12. 인용

〈세계 쌀 공급량과 소비량〉

(단위 : 백만톤)

구분	'16/'17 (추정)	'17/'18(전망)	
		12월	1월
기초재고량	133	138	138
생산량	487	483	485
수입량	41	44	45
국내총소비량	482	481	482
수출량	46	45	46
기말재고량	138	141	141

※ WASDE, 2018.1.12. 인용

□ 세계 식량가격지수

구분	'16 연평균	'17		
		10월	11월	12월
식량가격지수	161.5	176.5	175.6	169.8
육류	156.2	173.1	172.6	171.6
유제품	153.8	214.8	204.2	184.4
곡물	146.9	152.7	153.1	152.7
유지류	163.8	170.0	172.2	162.6
설탕	256.0	203.5	212.7	204.1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7년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전월(175.6포인트) 대비 3.3% 하락한 169.8포인트를 기록, '17.7월 이후 소폭 등락을 보이며 안정세를 지속하다가 하락함

- 식량가격지수 : ('17.9월)178.6→(10월)176.5→(11월)175.6→(12월)169.8

○ 곡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인 반면에 유제품, 유지류, 설탕, 육류 가격은 하락

※ 2018.1.15.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

6 무기질비료 Q&A 및 홍보

□ 우리나라 흙이 유기농이 어려운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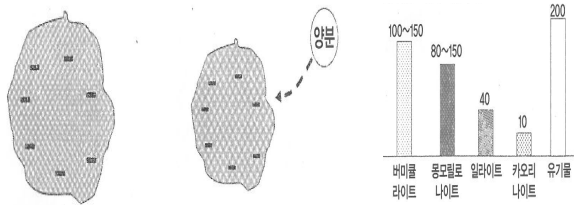
우리나라 흙이 유기농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토양의 양이온교환용량은 토양 표면에 있는 음전기인데 양분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양분을 보유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우리나라 점토인 카오리나이트는 양분 보유능력이 아주 낮은 토양에 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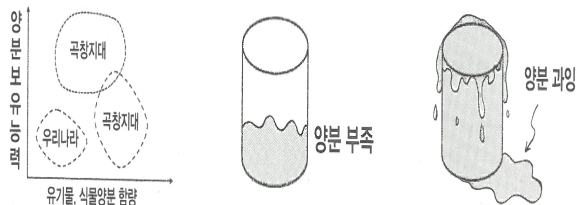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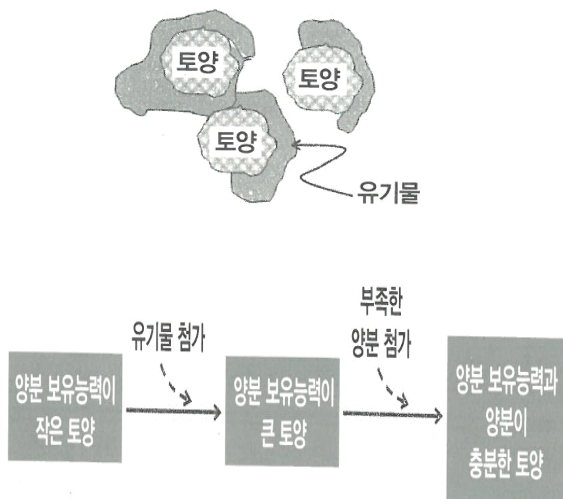
☎ 02-552-2812, FAX : 02-552-2814



우리나라 토양은 전 세계적으로 양분보유능력이 아주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비료성분이 조금만 부족하면 작물이 영양 결핍을 나타내고 비료를 많이 주면 쉽게 과잉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충분히 주어 토양 사이에 유기물이 잘 혼합되도록 하여 토양의 양분 보유능력을 높이고 토양분석을 통해 부족한 작물 양분을 보충해 주어야 원하는 생산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흙은 양분보유능력이 낮아서 처음 유기농을 시작할 때는 과거에 무기질비료를 과다 사용하면서 집적된 양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양분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비료 Q&A」(한국비료협회, 2014, pp. 94~95) 인용

7 이달의 주요 인사

□ 농식품부

- 1월 8일자
 -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전 농촌정책국장)

□ 농진청

- 1월 2일자
 - 홍수명 농산물안전성부 농자재평가과장
- 1월 22일자
 -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
 - 이용범 국립농업과학원장
 - 김두호 국립식량과학원장
 - 최동순 기획조정관
 - 한귀정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 윤종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 회원사

- (주)팜한농 1월 1일자
 - 이민중 비료사업부장(전 팜한농 경영전략담당)
- (주)카프로 1월 9일자
 - 권용대 대표이사 (전 카프로 부사장)
- 남해화학(주) 1월 24일자
 - 안병서 부사장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FAX : 02-552-2814